

# 전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지급 갈등 예고

### 이보라미 대표 발의·25명 조례안 제출 지급규모·대상 차이로 심의 진통 예상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전남도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전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이 23일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한 입법작업이 속도가 붙게 됐다.

하지만,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과 지급규모와 대상에 차이가 나 심의 과정에서 헝거주기 등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정의당)은 이날 동료의원 5명과 함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발

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이 용재도의회의장과 이민준 부의장, 차영수 이철 김기성 이장석 최현주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민 기본수당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방법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제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전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지급 규모는 연간 120만원(분기별 30만원), 지급대상은 여성과 청년 등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조례안은 전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과 차이가 있다.

전남도안은 지급규모가 60만원, 지급대상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했다.

결론적으로 지급규모는 전남도의회안이 2배가 많고 지급대상도 도의회 32만명, 전남도안은 24만여명으로 8

만명 정도 차이가 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 시군과 협약을 가진 뒤 8월 중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권을 가진 도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전남도와 차이가 있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미 의원은 "집행부 안대로 지급기준이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경영체가 남성 가장 위주로 등록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농어민은 수당지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남도의회 25명의 의원들은 향후 심의과정에서 차별 없는 지급대상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광주 공사장서 중장비가 차량·전신주 덮쳐

23일 오전 9시 26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중부지사 신축 공사장에서 전공 중장비(항타기)가 도로 쪽으로 쓰러졌다.

중장비가 전신주와 주행 중인 차량을 덮치면서 2명이 다치고, 주변 상가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비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광주경찰, 테이저건 휴대한 채 근무지 이탈

광주의 한 지구대 경찰이 테이저건을 휴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아 동료 경찰들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경찰은 하루가 지난 뒤 복귀했으며 연락두절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3일 지구대 소속 A경위가 출근을 한 뒤 한동안 연락이 두절돼 감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1일 '밤 근무' 일정에 따라 오후 8시30분 지구대에 출근한 뒤 동료와 함께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1차 순찰을 했다.

지구대로 복귀한 A경위는 2차 순찰을 나가기 전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순찰에 필요한 테이저건과 3단봉, 수갑 등을 반납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수색에 나섰다. A경위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22일 오전 A경위와 연락이 돼 광주 한 지역에서 만났으며 A경위 집에 보관 중인 테이저건 등을 회수했다.

경찰은 A경위의 행동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은 근무 중에는 소지가 가능하지만 근무지를 벗어나면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경위는 '허리가 아파 집에서 잠시 쉬고 나올려고 했는데 잠이 들어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부산 야산서 바위 떨어져 주차차량 3대 파손

부산의 한 야산에서 바위 3개가 굴러 떨어져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됐다.

23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께 해운대구 반야3동 공영주차장 뒷산에서 바위 3개가 굴러 떨어졌다.

떨어진 바위는 지름 약 1m 크기 2개와 50cm 크기 1개 등 총 3개이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1t 트럭 2대와 승용차 1대 등 차량 3대의 차체 일부가 파손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운대구청에 사고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바위가 굴러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

## 만취상태 운전하다 사고 낸 경찰관 직위해제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

23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문경시 불정동에서 문경경찰서 소속 A(33)경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승용차 안에는 A경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승용차 정지 결과 A경장의 혈중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4%로 나타났다.

문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경장을 직위해제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A경장 승용차에 동승한 동료 경찰관 2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3명은 동기생으로 문경의 한 펜션에서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학생들도 일본 제품 사용 안합니다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 교육지원청에서 평택시 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며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검찰, 허석 순천시장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했다는 전 이종철 순천시원의 고발장에 따라 참고인과 허 시장을 불리 수사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있으면서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가정해 1억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편집국장 A (52) 씨와 총무 B (44) 씨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앞서 허 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지역신문을 주축으로 한 법인 대표로 일했다. 이 기간에 5억 7400여만 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신문 제작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 전문가로 근무했던 이종철 전 순천시원은 6·13지방선거 직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 명세 등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 지능

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29일 허석 순천시장 등 3명이 국가보조금 1억 여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사기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자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무급 비상 근무했고 매달 신문사에 재정 후원을 했으나, 지역발전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허 시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로또지 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0여 년 전의 일을 들추어 쟁점화 하더니 당선되자마자 고발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성희롱 의혹' aT 상임감사 직무정지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모 상임감사의 직위가 정지됐다.

23일 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김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고,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전남지방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aT노조는 지난달 23일 '김 상임감사가 복수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임을 촉구했다.

이후 aT는 이사회를 열고 김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농림부에 요청했다.

농림부는 지난 9일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열고 aT이사회에 결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회계재정부를 통해 청와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또 성희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별도의 감사도 실시했다.

경찰 수사 결과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을 최종 결정하며, 후임 상임감사는 청와대가 곧바로 인선하게 된다.

김 상임감사는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감사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2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aT는 이날 나주 분사 대강당에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문화 선도를 위한 '갑질 근절 선언식'과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